

자유기고
①

무산된 쌀 토론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

- 영암신문 기고문



전 한농연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신명운

12월 17일, 정부가 개최하려 했던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가 1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 속에서 무산되었다. 그날 토론회에 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터라, 농민들의 토론회 무산 과정을 지켜보며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정부가 지금껏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진행 상황과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오다가, 이제 와서 미국·중국과의 잠정 합의 내용을 마치 협상의 마무리 성과인 양 밝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웃 농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진작부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려주어야 했던 게 옳지 않았는가? 만약 협상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상세히 보고해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대응 전략을 도출해 낼 수는 없었던 일이었는가?

비록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필자는 토론회 자리를 통해 350만 농민들이 지금까지의 정부 협상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했다. 최소시장접근물량 최대 8%에 2010년까지 수입 식용쌀의 국내 시판 물량을 최소시장

접근물량 중 30%까지 늘리겠다는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취약한 국내 쌀 시장 및 유통 여건, 농민들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상의 우려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동 관세화론'이나 '관세화 의무 발생론' 등을 얘기하여 스스로의 협상 여지마저 좁히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은 눈을 씻어 봐도 찾아낼 수 없었다. 농림부장관이 12월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만 잠깐 밝혔다가 그나마도 22일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관 스스로 번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연내에 협상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의 진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필자 또한 직접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본다.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전면 재실시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해수위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고 나서 결국에는 회의 진행을 위한 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해결하라고, 특히 중요한 쌀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제17대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던 제16대 국회와는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더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이웃 농민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피눈물 나는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마저도 얼마나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와 왔던가? 기껏해야 폭력적인 농민 시위가 있었으며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식으로만 일관해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학자들은 어떠한가? 풍전등화에 처한 쌀 문제와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하기에 절박하기만 한 쌀 문제와 농업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으로 남겨둘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농민들의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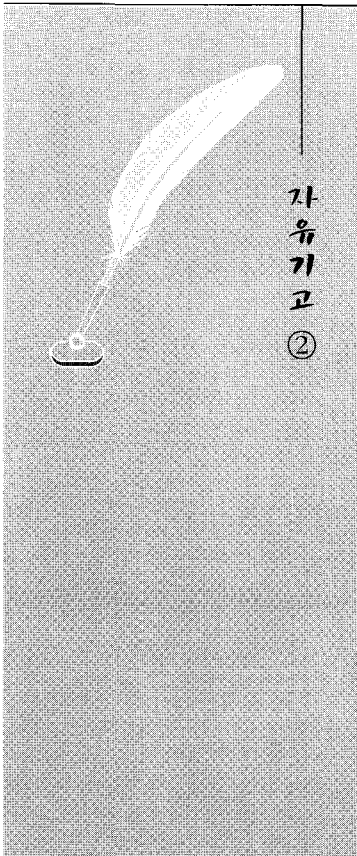
그래서 12월 20일, 한강 다리를 막아선 농민들의 검게 타 버린 애타는 외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350만 농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이다. 4천 7백만 국민들의 식량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나아가 7천만 민족의 희망인 통일 이후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마저 전달되지 않았을뿐더러,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

증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협상을 일방적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기에 농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의 한강 다리 점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농민생존권만큼 자영업자나 영업사원, 운송업자 등의 생존권과 직간접적 피해액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네 속담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다. 재벌 기업 회장들도, 노동자도, 자영업자와 식당

사장님도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권익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사회다.

그렇다면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리 죽어라 외치고 얻어맞고 피 흘려도, 생존권 차원의 요구마저 언론에 제대로 알려내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350만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필자가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민중연**

- 이 글은 영암신문 12월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농협 임원선거에 부처

1월말부터 전국 단위의 농협이 2004년도 결산 총회와 함께 이 감사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초 까지 대부분의 전국 농협이 대의원 이·감사 선거를 치루게 된다.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농협개혁을 외쳐 왔다. 그것은 자의에 의한 개혁의 의지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개혁과 제도적 모순을 바꾸자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농협개혁은 을유년 을 한해 결산 총회를 필두로 자율에 의한 개혁